■ 논 단

은행이 신청한 경매절차와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

김 상 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 약 문

대상판결은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배당요구 자격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이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 등에서 요구하는 관련 소명자료를 배당요구 종기 후 배당표 확정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하였을 때, 그러한 배당요구는 과연 진정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인지 문제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설사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표 확정 전까지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배당요구가 적법하고, 따라서 임금채권자들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우선변제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배당표 확정 전에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로, 임금채권자들의 권리실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임의경매의 주된 당사자인 금융기관이나 채무자인 회사에 있어서는 그러한 임금채권의 우대가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닌지, 소액임차인 등 임금채권자가 아닌 다른 우선변제권자(배당요구가 필요한)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다. 이 연구는 적법한 배당요구는 무엇인지, 임금채권자라는 특수한 권리자의 보호만을 염두에 둔 판단인지 등 대상판결의 의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은 법정책적으로 임금채권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집행절차의 안정성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을 논거로 하고 있다.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을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도 대상판결을 실무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적어도 집행절차의 안정성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실무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집행법원은 집행절차의 운영으로 그러한 절차지휘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집행법원은 적극적으로 배당요구신청에 대한 보정을 명하고, 이에 따르

지 않으면 배당요구신청서 각하 등으로 무엇인가 절차위반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판운영이 될 것이다. 임금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범위 등을 불투명하게 남겨둔 채로 배당이의소송에서 명확해지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적절한 집행절차운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주제어 : 민사집행, 임의경매, 배당요구, 임금채권자, 우선변제권자

— <目 次> —

[사실관계]	2. 구법에서의 실무
[제1심의 판단]	3.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 하에서의 실무
[원심의 판단]	4. 학설에서의 논의
[대법원의 판단]	5. 소결
[연구]	Ⅲ. 일본법에서의 논의
Ⅰ. 들어가며	Ⅳ. 대상판결의 평가
Ⅱ. 임금채권의 배당요구방식	Ⅴ. 나가며
1. 서	

[사실관계]

甲들은 A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31.부터 2016. 7. 15.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한편 A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乙들(대형은행 2곳)은 A 소유 부동산 및 공장기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하게 되었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甲들은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2016. 12. 1.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배당요구 종기는 2016. 12. 19). 즉, “A로부터 별지 목록 ‘체불액’란 기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48,877,7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최우선변제 및 우선변제를 받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체불임금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명자료는 “추후 첨부 예정”이라고만 기재하였다. 결과적으로 배당요구 종기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2018. 10. 23.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해당 자료, 즉 (1) 이 사건 경매절차에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액수에 관한 채권계산서 및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8. 2. 23. 발급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액수가 기재됨)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甲이 위와 같이 해당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경매법원은 2018. 11. 21. 배당기일에서 甲들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乙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甲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8. 11. 27. 乙들(경매신청인 이외에 중소기업금융 관련 공익법인 1곳을 추가함)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乙들은 甲들이 배당요구서에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이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지도 않은 이상,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여 甲들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乙 주장의 타당성이 문제된 사안이다.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乙의 본안전 항변(甲들에게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각하하는(결과적으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64654 판결).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에서는,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및 위 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바, 민사집행법 제88조, 민사집행규칙 제48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에 제한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집행법원으로서 배당요구한 자가 진정한 근로자인지 및 그가 우선변제 받아야 할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인데, 경매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간이한 심리방식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경매법원

으로 하여금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인지를 원활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위 재판예규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등에 근거한 배당요구시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위 재판예규에 규정된 서류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예시한 것이며,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거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에서 배제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다른 자료에 의하여 배당요구자가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채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보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甲들은 배당요구 신청서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합계만을 기재하고, 구체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각 구체적 액수를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임은 명확히 밝혔는바, 채무자인 A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로서도 甲들이 주장하는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乙들은, 甲들이 제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작성의 각 확인통지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들이 A의 근로자였던 사실이나 甲들이 주장하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구체적인 액수 자체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한바, 甲들은 모두 A의 기존 근로자들로서 진정한 임금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甲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는 진정한 임금채권자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할 것이다.”

추가로 다음과 같이 甲들이 여전히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채권자라는 본안판단도 하였다.

“살피건대,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상한액을 제한하여 일부만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당금에 대한 대위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병존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7937 판결 등 참조), (선정자 2명을 제외한) 甲들은 2017. 5. 17. 및 2017. 6.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상한의 범위 내에서 별지4 근로복지공단 지급내역 목록 ‘체당금지급액(최우선변제금) 지급합계’란 기재 금액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그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인천)2020나11368 판결)은 제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甲들이 배당표 확정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 소명자료나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배당요구는 진정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보아 乙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甲들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인정하여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甲들의 인용액은 최고 약 2천만원에서 최저 4만원까지 다양하다.

원심은 특히 제1심의 판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단도 추가하였다.

“나아가 ① 임금채권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수단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기초가 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현실적으로 임금채권의 확보를 담보할 마땅한 다른 방법이 없으며, 임금채권은 사용자를 유일한 채무자로 하므로 위험분산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②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물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일반채권의 가압류권자로서가 아니라 임금채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참조),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소명되지 않았다고 하여 경매 목적물의 매각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의 존재 여부는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의 순위 문제일 뿐이어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여야 하는 시기적 제한을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입법취지나 목적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국가가 법률로 보장하는 데 있는바, 비정규직 또는 비전형 근로자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형태가 더욱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단기간 내에 위 재판예규에서 정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적법한 배당요구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회의 변화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 배당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 즉 배당이의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배당요구 채권자가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

乙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는 상고기각을 판결하였다(대판 2022. 4. 28. 2020다299955).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채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보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연구]

I. 들어가며

사건의 내용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또한, 대상판결도 매우 간결하고 명확하게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배당요구 자격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이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지 않은 임금채권자¹⁾들이,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요구하는 관련 소명자료를 배당요구 종기 후 배당표 확정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하였을 때, 그러한 배당요구는 과연 진정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인지 문제된 사안이다(제1심과 원심의 판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체법적으로 甲들의 임금채권이 인정되는 점에는 다툼이 없고, 단지 소명자료의 제출시기가 문제된 사안이다). 대법

1) 이하, 임금, 퇴직금 등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의 채권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원을 포함 제1심 및 원심 모두 설사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표 확정 전까지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배당요구가 적법하고, 따라서 임금채권자들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들의 배당요구 자체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하였지만, 우선변제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은 배당요구 종기로부터 장기간이 지난 후 배당표 확정 전에 이르러 비로소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배당요구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논점을 내포하고 있다. 대법원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한 관계로 임금채권자들의 권리실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판례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임의경매의 주된 당사자인 금융기관이나 채무자인 회사에 있어서는 그러한 임금채권의 우대가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닌지, 소액임차인 등 임금채권자가 아닌 다른 우선변제권자(배당요구가 필요한)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다.

이하, 법 제88조 제1항과 규칙 제48조 제2항의 해석론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적법한 배당요구는 무엇인지(해당 규정들을 강행규정으로서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지 등), 나아가 임금채권자라는 특수한 권리자의 보호만을 염두에 둔 판단인지 등 대상판결 및 원심과 제1심 판단의 의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임금채권의 배당요구방식

1. 서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채채권을 포함)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규칙 48조 1항), 사안에서 甲들은 제1심의 판단에서도 보듯이 배당요구 신청서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합계만을 기재하고, 구체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각 구체적 액수를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규칙 48조 2항이 정한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이지 않았고, 배당요구 종기 후 배당표 확정 전에 이르러 이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배당요구는 적법한 배당요구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구법에서의 실무

민사집행법 제정 전에는 배당요구의 방식에 대해 1990년에 개정된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의 3에서 “법 제552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요구는 채권(이자채권 기타의 부채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즉, 현행 규칙 48조 1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의 신설은 1990년 개정된 민사소송법 강제집행편 부분(제605조)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해 “ ①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배당요구는 그 원인을 명시하고 법원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는 자는 거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배당요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점을 받아들인 개정이라고 해석된다.

위와 같은 규정을 본다면, 1990년부터 법과 규칙이 제정되는 2002년까지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면 충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실무지침서²⁾에서는, 임금대장사본이나 노동부의 임금계산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배당요구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 사유를 소명토록 한 다음 채권의 인부절차를 밟는 것도 실무처리의 한 방법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후술하듯이 일본에서는 규칙 48조 2항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자료의 제출의무를 당연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점과도 유사하다.

위와 같이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점을 대법원은 규칙의 개정에 앞서 재판예규를 통해 명확히 하였다. 사안의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이다. 1997년에 제정되고 201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 재판예규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를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정하고 있다(제정 당시와 현행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표를 작성하였다).

〈표 1〉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

제정당시(1997. 10. 29. [재판예규 제541호])	현행(2017. 5. 1. [재판예규 제1652호])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 자료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발급의 체불임금확인서 이외에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가.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단 의제자백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제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2) 법원행정처, 개정중보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상), 1992, 450면.

제정당시(1997. 10. 29. [재판예규 제541호])	현행(2017. 5. 1. [재판예규 제1652호])
<p>외한다)</p> <p>나.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 제32조 참조) 또는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0조 참조)의 각 사본</p> <p>다.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국민연금법 제77조 참조)</p> <p>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를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제143조 참조) 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 참조)</p> <p>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연금법 제75조 참조)</p> <p>바. 의료보험조합이 발급한 의료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의료보험법 제54조 참조)</p>	<p>첨부하여야 한다.</p> <p>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국민연금법」 제90조제2항 참조)</p> <p>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제143조 참조)</p> <p>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국민연금법」 제88조 참조)</p> <p>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참조)</p> <p>마.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고용보험법」 제17조참조)</p> <p>바. 위 가.호 내지 마.호 기재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 제41조 참조) 또는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8조 참조)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가.호 내지 마.호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p>

재판예규상으로는 과거의 예규와 현재의 예규에서 첨부할 소명자료에 대해 몇 가지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시 제출할 서류는 2가지이다. 첫째는 체불임금확인서(제정 당시이고 현행은 법령개정에 맞게 수정) 또는 일정한 판결서(제정 당시에는 가호 자료였다) 중 하나, 둘째는 가호에서 바호에 이르는 자료 중 하나이다(마호 자료는 제정 이후 개정으로 추가되었고, 제정 당시 나호 자료가 현행 바호 자료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의 현황에 맞게 임금채권자가 적어도 2가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법원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재판예규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과 동일시 할 수 없음은 물론이지만, 적어도 법원이 스스로 지켜야 할 규칙으로서 제정하고 수차례 개정해 왔다는 취지를 경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제1심판결의 판단에는 아쉬움이 있다. 즉, 제1심판결은 재판예규에 대해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인지를 원활하게 판

단할 수 있도록, 위 재판예규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등에 근거한 배당요구시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위 재판예규에 규정된 서류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예시한 것"이라고 한 점은 너무 쉽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법은 물론 규칙에서도 임금채권자들의 배당요구에 일정한 요건을 부과한 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재판예규도 있다는 점에서는, 단순히 예시에 불과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좋다는 해석을 쉽게 이끌어 내는 것은 법원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로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3.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 하에서의 실무

현행 규칙 48조는 2002년 제정시에 기존 민사소송규칙 121조의 3 규정을 1항으로 하고, 여기에 2항을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규칙 48조에 대해서는, 그 입안자의 해설³⁾에서 “같은 조 1항의 기재사항은 채권신고 최고를 받은 가압류채권자, 담보권자 등이 신고할 사항과 동일하고(법 84조 4항 참조), 같은 2항은 실무례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재판예규도 포함하여 실무의 방침을 명문화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배당요구의 조건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도 포함된다는 점이 규칙상으로 명확히 규정된 것이다.”⁴⁾

그러나 실무의 대응은 다음에서 보듯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정 후 나온 실무의 지침서⁵⁾에서는, 집행법원은 신청서에 적힌 내용과 첨부서류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하고,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이 아닌 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보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되지 아니하면 각하를 하지만, 실무에서는 부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더라도 별도로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배당표에서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하는 처리방식을 취하고 있는 예가 많다고 언급하고 있다(그러면서 배당요구를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고, 부적법한 배당요구신청에 의해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진술을 하고[법151조], 나아가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고 부언한다). 이러한 실무의 태도는 법과 규칙 제정 이전부터 사실상 임금채권자가 소명자료를 늦게 제출하더라도 실제법상 적법한 배당요구라면 이를 받아들여준다는 처리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⁶⁾

결과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집행법원은 배당표에서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하는

3) 법원행정처, 민사집행규칙해설, 2002, 156면.

4) 아울러 규칙 81조도 새로이 규정되고 법원사무관등은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채권계산서를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해야 하는 것이 되었지만, 1주라는 기간은 훈시규정이므로 그 후에 제출된 계산서도 배당표 작성에 도움이 되므로 참고한다(법원행정처, 앞의 책(주3), 248면).

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2003, 430면 이하.

6) 이러한 실무처리의 설명은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 부동산집행(2) -, 2020, 20면 이하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처리방식이 대상판결에서 보는 집행법원의 대응과 같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의 실무 처리방식을 판례와 함께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집행에서 우선변제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채채권을 포함)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규칙 48조1항),⁷⁾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⁸⁾ 임금채권자의 퇴직금을 배당요구채권으로 한다면 집행법원은 퇴직금이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는 점⁹⁾을 고려하여,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이라고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¹⁰⁾ 만일 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자료에 의하여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¹¹⁾에 퇴직금을 추가하여 기재해도 배당요구한 것이 되지 않는다.¹²⁾ 해당 판례(2008다65242)는 배당요구가 갖는 의미, 즉 배당요구의 필요성과 기재방법으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않는 배당요구의 기재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배당요구서 기재 내용 및 첨부자료에 의할 때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그 배당요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 부분, 말하자면 첨부

-
- 7) 대판 2008. 12. 24. 2008다65242(배당요구를 할 경우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
- 8) 사법연수원, 앞의 책(주6), 14면 이하. 또한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대판 1999. 4. 9. 98다47412, 대판 2008. 6. 26. 2006다1930 등 참조),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대판 2015. 8. 19. 2015다204762).
- 9) 대판 2007. 3. 30. 2004다8333 등.
- 10) 사법연수원, 앞의 책(주6), 15면 이하.
- 11) 참고로 규칙 81조의 채권계산서의 제출 최고와 관련하여, 이 최고에 응하여 반드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사법연수원, 앞의 책(주6), 25면).
- 12) 사법연수원, 앞의 책(주6), 16면은, 이를 대판 2008. 12. 24. 2008다65242의 판단(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면에 의하면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다거나 당초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의 액수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최우선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을 인용하며 언급하고 있다.

자료를 이용하여 배당요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해당 자료의 의의를 생각할 때 의미심장하다. 다만, 배당요구서에는 ‘입금’으로만 기재한 후 배당요구 종기 이후 채권계산서 제출시에 퇴직금을 추가로 기재하였는데, 이때(채권계산서 제출시) 첨부서류로 위 입금채권만 기재되어 있는 체불금품확인원만 제출한 사안이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체불금품확인원만이 아닌 퇴직금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어떻게 판단했을까 의문이 든다. 어쨌건 배당요구한 채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소명자료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는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2) 한편,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요구의 경우, 집행문 없이 판결정본 만을 붙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상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문을 덧붙인 판결정본(또는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배당요구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하고 있다.¹³⁾ 물론, 해당 판례¹⁴⁾에서는 판결정본이라기보다는 지급명령 정보의 경우였지만, 판례와 실무가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요구라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당 집행권원의 정보 등이 제출되어야만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급명령에 의해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지급명령 정보 등을 제출할 한계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라고 하는 점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 판례이다.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한 배당요구의 경우에는 그 제출시점을 배당요구의 종기라고 한 점에서 대상판결과 비교된다.

(3) 반대로 집행권원에 의하지 않는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의 배당요구와 관련하여서는 임차보증금채권자의 배당요구에 관한 판례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있어서 임차인이 소명자료로서 제1차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그 임대차계약 갱신 후의 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후, 배당요구 종기 후에 제1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원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하는 것으로 허용된다.¹⁵⁾ 일정한 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주

13) 사법연수원, 앞의 책(주6), 16면 이하.

14) 대판 2014. 4. 30. 2012다96045(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보(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보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보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보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15) 대판 2012. 7. 12. 2010다42990(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고, 또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에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는 최초 임대차계약에

장하며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배당요구 종기 후에 제출되는 서류는 이를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허용된다는 판례이다. 이러한 해석이 성립하려면, 그러한 보완서류가 제출되기 이전에 어떠한 배당요구를 한 것인지가 이미 명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통해 어떤 우선변제를 주장하는 것인지 명확해야 하는 점을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그러한 자료제출이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면 배당요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예로서 상가임대차에 관한 판례¹⁶⁾가 있다. 여기서는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순히 자료를 보완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즉, 최후 임대차계약서가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비교하여 임대차기간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 및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을 모두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임차인의 배당요구는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배당요구의 종기 후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것을 이미 배당요구한 채권에 관한 주장을 단순히 보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임차인의 주장은 배당요구 종기 후 배당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해석은 배당요구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통해 확정된 배당요구 채권을 기본으로 하여 배당요구 종기 후에 제출된 서류를 단순히 보완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이다. 이 판례도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제출된 배당요구신청서와 소명자료를 통해 배당요구된 채권은 무엇인지 명확히 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상판결이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다가 배당표 확정 전에 제출한 것을 '보완'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판례와 비교할 때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참조)...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서가 갱신되면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 기간만이 다를 뿐 당사자, 목적물, 보증금 액수 등 그 대상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면서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지만 배당요구 신청서에서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에 의한 주민등록전입일과 주택의 인도일을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급되어 유지된 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6) 대판 2014. 4. 30. 2013다58057.

(4) 이상은 임금채권이 아닌 경우이고, 대상판결에 앞서 임금채권의 배당요구를 다른 판례로는 다음의 2개를 찾을 수 있다. 직접적으로 대상판결에서와 같은 논점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대상판결의 결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되어 여기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 개시 전에 목적부동산을 가압류하였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당 가압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의 취급이다. 이에 대해 판례¹⁷⁾는,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의 해석은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이지만,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자료는 배당표확정 전에 제출한 경우, 해당 임금채권자는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배당요구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적어도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말하자면 경매개시절차 전에 가압류를 하였고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대상판결에서 실시하는 임금채권의 보호라는 정책적인 면이 근거로 나온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후술하듯이 경매법원은 피보전채권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이 임금채권이라면 추가서류 제출을 촉구하는 등 보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하나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해당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의 취급이다. 앞서 본 판례의 해석을 근거로 한다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17) 대판 2002. 5. 14. 2002다4870 등. 이 때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는다(대판 1988. 11. 8. 86다카2949, 대판 2004. 7. 22. 2002다52312).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¹⁸⁾ 배당요구 자체의 효력을 인정한 결과론으로서 앞서 본 판례의 해석과 동일한 논리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 학설에서의 논의

학설은 보통 규칙의 내용과 판례를 소개하는 정도로 서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해당 규칙 48조를 인용하거나,¹⁹⁾ 최신판 체계서의 경우에는 대상판결도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²⁰⁾ 또한 실무가에 의한 주석서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않는 배당요구의 경우) 대체로 소장에 있어서의 청구원인사실의 기재와 같은 정도의 표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고,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따로 하지 않고,²¹⁾ 그 채권을 배당표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²²⁾ 위와 같은 학설은 체계서나 주석서의 성격상 이론적인 논의보다는 판례와 실무의 입장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 밖에 논문 등의 문헌은 찾기 어렵다.

5. 소결

위에서 보았듯이 판례와 실무는 임금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로서 주로 법정책적인 면에 주안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배당표의 확정이라는 배당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임금채권자는 자신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판례와 실무에 즉응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배당표의 확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²³⁾ 미리 작성한 배당표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심문하여 그 의견을 듣고 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한 다음, 이에 기하여 배당표원안에 추가, 정정할 것이 있으면 추

18) 주8)에서 본 대판 2015. 8. 19. 2015다204762의 해석이다.

19) 이시윤, 신민사집행법[제8개정판], 박영사, 2020, 313면, 전병서, 민사집행법, 박영사, 2019, 286면.

20) 김홍엽, 민사집행법[제7판], 박영사, 2022, 199면. 특히 앞서 본 지급명령에 관한 판례(2012다96045)도 인용하고 있다.

21) 민일영 편집대표, 주석 민사집행법(III)[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236면[성창호].

22) 민일영 편집대표, 앞의 책(주21), 238면.

23) 사법연수원, 앞의 책(주6), 194면.

가, 정정하여 배당표를 완성·확정하는데(법149조2항, 152조2항),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지 않는다(법 152조3항 참조).

따라서 대상판결에 의하면, 임금채권자는 배당기일에서 배당의의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배당표가 확정되는 배당이의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배당요구신청이 각하된 것도 아니므로 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게 되고(법 146조), 배당표를 확정시키지 않도록 배당의의를 하고 다시 그 후의 절차인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면,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안에서 배당요구 종기는 2016. 12. 19이었고 배당이의소송 원심의 변론종결일은 2020. 10. 22.이었다. 4년 동안 불투명한 상태로 놔둘 수 있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절차진행의 실효성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문제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배당요구 종기로부터 약 2년 후에 이르러 비로소 소명자료가 제출되었고, 결과적으로 소명자료를 통해 배당표가 수정되었지만, 2년이 되도록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가 보정되는 일도 없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일본법에서의 논의

배당요구를 규정하는 일본 민사집행규칙 제26조²⁴⁾는 앞서 본 우리의 구민사소송규칙 제121조의 3과 동일하고, 규칙 48조2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의 제정으로 배당요구 가능한 채권자가 한정된 관계로 배당요구시에는 그 자격이 있음을, 우리의 임금채권자에 해당하는 일반선회특권자는 해당 선회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를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²⁵⁾ 따라서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라면, 배당표의 기재사항인 채권의 금액을 원본, 이자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재²⁶⁾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규칙에서는 정하지 않지만, 일본 민사집행법 51조1항²⁷⁾의 해석상 당연한 것으로서, 일반선회특권자는 같은 법 181조1항 각호²⁸⁾에서 규정하는 문서를 배당요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²⁹⁾ 특히 일반

24) 배당요구의 방식이라는 제명으로,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그 밖의 부채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 및 금액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5) 田中康久, 新民事執行法の解説<増補改訂版>, 金融財政事情研究会, 1980, 140頁.

26) 일반 선회특권자는 집행권원이 없기 때문에 채권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상세한 기재가 필요하다고 한다(山本和彦外編, 新基本法コンメンタル 民事執行法, 日本評論社, 2014, 148頁).

27) 우리 법 88조1항은 일본 민사집행법 51조1항과 같지만, 후자 2항은 우리 법과는 달리 “배당요구를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집행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8) 우리 법 264조에 상당한데, 보다 자세하게 “1.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확정판결, 가사사건절차법 제75조의 심판 또는 이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의 등본. 2.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의 등본. 3. 담보권의 등기(가등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4. 일반 선회특권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선취특권자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인지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권의 발생 연월일과 그 원인을 특정하여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³⁰⁾ 또한, 임금채권자의 경우, 임금의 일부인 퇴직금이나 상여금은 포함되지만, 사내예금의 환급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³¹⁾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격을 증명하는 자료³²⁾를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은 보정을 명하고 보정되지 않으면 배당요구를 각하하고,³³⁾ 이 각하에 대해서는 앞서 보았듯이 일본 민사집행법 51조2항이 집행항고(우리 법에서 말하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일 배당요구를 각하하지 않으면 채무자, 압류채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집행이의로 다룰 수 있다.³⁴⁾ 일반적으로 배당요구가 각하되는 경우로서는 배당요구자격이 없는 경우, 배당요구자격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배당요구서의 불비가 보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라고 해석한다.³⁵⁾

한편, 배당요구는 하였지만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고 배당절차 종료 후에 일반선취특권자가 하는 부당이득의 가부에 대해서는, 등기한 선취특권자라면 저당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지만, 미등기자라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일본의 판례는 저당권자와 일반채권자 사이에 결론에 차이(전자는 부당이득이 가능하지만, 후자는 부당이득이 불가능)를 두고 있고, 그 근거는 결국 목적부동산인 특정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실체법상의 우선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위와 같은 판례의 논리에서 본다면 등기하지 않은 일반선취특권자의 부당이득은 부정될 것이라고 해석된다.³⁶⁾

아울러 일본 규칙 60조(우리 규칙 81조와 같다)에서도 법원서기관은 채권계산서 제출을 최고하게 되는데, 이 최고는 배당기일 또는 변제금 교부일이 정해진 때에 한다.³⁷⁾ 또한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1주 이내에 계산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은 훈시규정이요 1주 초과하여 제출

증명하는 문서"라고 열거하고 있다. 이 4호 문서는 공문서이든 사문서이든 관계없다(東京地裁民事執行實務研究会編著, 不動産執行の理論と實務, 法曹會, 1994, 157頁).

29) 最高裁判所事務總局民事局監修, 條解民事執行規則(改訂版), 司法協會, 1998, 106頁. 香川保一監修, 注釋民事執行法<第3卷>, 金融財政事情研究会, 1983[三宅弘人], 167頁.

30) 香川保一監修, 앞의 책(주29), 167頁. 일본 민사집행규칙 27조에 의해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제출된 배당요구를 통지해야 하고, 이것은 특히 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에 대응하는 대책을 고려할 기회를 주어야 하기 위해서이다.

31) 鈴木/三ヶ月編, 注釋民事執行法(2), 第一法規, 1986, 128頁[伊藤眞].

32) 임금채권자의 경우, 임금대장 사본, 임금미지급증명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한다(浦野雄幸, 判例民事執行法, 三省堂, 2005, 116頁).

33) 香川保一監修, 앞의 책(주29), 169頁. 鈴木/三ヶ月編, 앞의 책(주31), 129頁. 東京地裁民事執行實務研究会編著, 앞의 책(주28), 160頁. 相澤眞木/塚原聰編著, 民事執行の實務[第4版] 不動産執行編 上, きんざい, 2018, 327頁. 伊藤眞外編集代表, 條解民事執行法[第2版], 弘文堂, 2022, 487頁[杉山悦子].

34) 中野貞一郎/下山正明, 民事執行法[改訂版], 青林書院, 2021, 554頁.

35) 山本和彦外編, 앞의 책(주26), 148頁.

36) 東京地方裁判所民事執行センター實務研究会, 民事執行の實務[第3版], きんざい, 2012, 278頁. 그 밖에 후술(주40)하는 관련 문헌들이 일본법의 배당과 부당이득 문제를 다루고 있다.

37) 最高裁判所事務總局民事局監修, 條解民事執行規則(改訂版), 司法協會, 1998, 232頁.

된 것도 무효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³⁸⁾

위와 같이 일본법에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정을 명하고 보정되지 않으면 배당요구신청을 각하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은 배당요구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집행항고(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결국 임금채권자는 궁극적으로 배당요구신청의 각하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통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요구신청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나아가 설사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인정되어도 배당이익을 통해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않는 한 배당절차 종료 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점도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 어쨌건 임금채권자라고 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하나의 채권자로서 다른 동등한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는 점은 시사적이다.

IV. 대상판결의 평가

위에서 다른 논리를 근거로 하여 대상판결과 그 하급심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제1심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1) 재판예규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등에 근거한 배당요구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배당요구자격을 원활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예시한 객관적인 자료에 불과하고,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다른 자료에 의하여 배당요구자가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2) 甲들은 배당요구 신청서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합계만을 기재하고, 구체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각 구체적 액수를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명확하고, 채무자인 A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로서도 甲들이 주장하는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乙들은 甲들이 A의 근로자였던 사실이나 甲들이 주장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구체적인 액수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甲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는 진정한 임금채권자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라는 점이다.

제1심은 원심이나 대법원과는 달리 직접 임금채권자의 보호라는 법정정책적 근거는 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1)과 같은 논거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법원이라면 특히 따라야 하는 재판예규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해석으로 쉽게 인정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배당요구신청에 대해 법원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보정을 하게 한다는 의미도 몰각되는 해석이 아닌가 우려된다. 또한, 법원이 진정한 배당요구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2)와 (3)의 논

38) 最高裁判所事務總局民事局監修, 앞의 책(주37), 233頁.

거와 같이 채권의 금액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다른 압류채권자 등이 배당요구자격을 다투지 않는 점이 적법한 배당요구라는 결론의 근거가 된다는 해석도 논리적이지 않다. 적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히 집행문 정본을 제출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도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³⁹⁾

다음으로 원심은 제1심을 인용하고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임금채권의 정책적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배당요구 적법성의 근거로 삼고 있다. 즉, (1) 임금채권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사용자를 유일한 채무자로 하므로 위험분산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2)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물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아도 임금채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의 존재 여부는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의 순위 문제일 뿐이어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여야 하는 시기적 제한을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단기간 내에 위 재판예규에서 정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적법한 배당요구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배당요구 채권자가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1)과 (3)의 논거는 사실상 임금채권의 보호라는 법정정책적인 이유에서 나오는 것이다. 특히 (3)의 논거에서 “사회적 변화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도 그러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그 취지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만일 (1)의 논거에서 말하는 임금채권의 특징과 임금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라면, (3)의 논거도 (1)과 (2)의 논거와 비교하면 논거라기보다 결론에 가까울 것이다. 또한, (2)의 논거에 대해서는, 해당 판례에 대해 앞서 언급하였지만, 요컨대 가압류를 한 경우라면 해당 가압류발령절차에서 제출된 소명자료의 심리가 있었다는 점과 비교할 필요가 있고, 가압류재판을 받았다는 것과 단순히 소명자료 없이 배당요구를 한 것을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인 대법원의 판단은,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

39) 특히 사법연수원, 앞의 책(주6), 21면에서는 “배당표 작성을 위해서는 배당요구채권의 내용, 성질, 범위, 순위 등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존부 자체가 쉽게 구분되지도 않으므로 배당표를 작성할 때까지 집행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실체적 존부 및 범위를 심사할 수 있고, 다만 집행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조사하는 것 이상의 심사나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뿐이다.”고 하면서 첨부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 사안에서도 실제로 의미 있는 서류로 제출된 것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8. 2. 23. 발급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의 주(14) 판례도 참조.

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일단 법해석을 위한 논리적인 논거보다는 법정책적으로 임금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실무상 임금채권자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이고 동시에 배당요구도 해야 하는 채권자가 필요한 소명자료 없이 배당요구신청을 하여도, 배당표에서 제외할 뿐 별도의 재판관을 하지 않고 있고, 대법원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배당표에서 제외된 임금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자료를 제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논거는 임금채권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정책적 필요성이다. 임금채권을 강조한 점에서 본다면, 또한 앞서 본 판례와 비교한다면, 임금채권자와 동일한 우선변제권자인 임차인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앞서 본 판례(주15, 16)를 보아도 그러하고 무엇보다도 대상판결의 법정책적 논거는 임금채권자에 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당표 확정 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만일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고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을까 문제된다. 대상판결의 해석이라면 배당표확정 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불가능하게 된다.⁴⁰⁾ 대상판결이 이러한 결과도 예상하고 판단을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판례는 정책적으로 임금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는 점, 소명자료 제출 없이 배당절차가 종료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배당절차의 종료 시점에서라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배당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한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어차피 우선변제권을 보호해야 하므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하고 배당을 받도록 배려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배당요구 종기 후 배당표 확정 전까지(실제로는 배당이의를 하기 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한 후 배당이의를 하지 않아도, 판례에 의하면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인정될 것이다.⁴¹⁾

40) 대판(전) 2019. 7. 18. 2014다206983은 배당요구가 인정되면 배당이의하지 않아도 우선권자이든 일반 채권자이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는 많은 평석이 나와 있고 판례평석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해당 판례의 평석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장재형, 배당절차의 완결성에 대한 재논의, 판례연구 제33집 2, 2020, 51면 이하. 이호선, 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승소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재판과 판례 제29집, 2020, 59면 이하. 전병서/유나연,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6권, 2020, 289면 이하. 전원열, 민사집행절차상 배당요구·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저스티스 제178호, 2020, 212면 이하. 박종원, 배당이의하지 아니한 일반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고, 민사판례연구 43권, 2021, 507면 이하. 김관호, 민사집행절차상 배당요구에 의한 배당종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7권, 2021, 64면 이하. 김상수, 배당과 부당이득을 통해 본 소송법과 실체법의 조화, 민사소송 제26권 제3호, 2022, 423면 이하.

V. 나가며

위와 같이 대상판결은 법정책적으로 임금채권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집행절차의 안정성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을 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해석론을 제시하는 선례로서의 가치보다는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주안을 둔 것이라고 평가된다. 반면으로 실제 집행절차에서는 주식회사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받은 금융기관이 경매신청을 하였을 때,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자의 존재는 불확실한 상태로 배당표 확정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는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을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도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채권자의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늦게 제출해도 되므로, 이해관계인이나 집행절차의 운영주체가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대상판결을 실무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적어도 집행절차의 안정성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의 운영으로서는 최대한 2가지 목적(절차의 안정성과 실체적 권리의 보호)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 달리 말하면 실무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실무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해당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민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변론주의에서도 보듯이 사실의 주장과 증거의 제출은 당사자의 권능이고 책임이며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절차를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집행법원도 집행절차의 운영으로 그러한 절차지휘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점은 앞서 본 실무지침서에서도 보았듯이 집행법원이 적극적으로 배당요구 신청에 대한 보정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소송에서 재판장이 소장각하명령을 내리듯이 배당요구신청서 각하 등으로 무엇인가 절차위반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집행법원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재판운영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보정명령과 배당요구신청의 각하재판을 통하여 임금채권자는 늦어도 해당 각하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라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제출의 어려움이 있다면 보정명령의 단계에서 집행법원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임금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범위 등을 불투명하게 남겨둔 채로 배당이의소송에서 명확해지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적절한 집행절차운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집행절차의 안정성(예를 들어 납을 가망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자의 배당요구의 효력은 중요하고, 매각허가결정 직전에 배당금액이 정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납을 가망이 없어 절차가 취소되는

41) 원심에서도 인용되었고 주17)에서도 인용한 판례(2002다52312) 참조.

264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01호 (2023.1.)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은 집행절차라는 제도의 본질적 요소로서 쉽게 포기하거나 경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당요구의 자격을 엄격히 하고 배당요구의 구체적 절차를 명확히 정했으며, 이러한 점이 우리 법에도 대부분 영향을 미친 일본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대응은, 임금채권자에 대한 매우 냉정한 대응이라는 문제점은 별개로 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한다. ☐

(논문접수 : 2022. 12. 14. / 심사개시 : 2023. 1. 5. / 게재확정 : 2023. 1. 23.)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 법원행정처, 개정증보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상), 1992
법원행정처, 민사집행규칙해설, 200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2003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 부동산집행(2) -, 2020
김홍엽, 민사집행법[제7판], 박영사, 2022
이시운, 신민사집행법[제8개정판], 박영사, 2020
전병서, 민사집행법, 박영사, 2019
민일영 편집대표, 주식 민사집행법(III)[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 김관호, 민사집행절차상 배당오류에 의한 배당종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7권, 2021
김상수, 배당과 부당이득을 통해 본 소송법과 실체법의 조화, 민사소송 제26권 제3호, 2022
박종원, 배당이의하지 아니한 일반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고, 민사판례연구 43권, 2021
이호선, 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승소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재판과 판례 제29집, 2020
장재형, 배당절차의 완결성에 대한 재논의, 판례연구 제33집 2, 2020
전병서/유나연,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6권, 2020
전원열, 민사집행절차상 배당요구·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저스티스 제178호, 2020

< 일본문헌 >

- 田中康久, 新民事執行法の解説<増補改訂版>, 金融財政事情研究会, 1980
山本和彦外編, 新基本法コンメンタール 民事執行法, 日本評論社, 2014
東京地裁民事執行實務研究会編著, 不動産執行の理論と實務, 法曹會, 1994
最高裁判所事務總局民事局監修, 條解民事執行規則(改訂版), 司法協會, 1998
香川保一監修, 注釋民事執行法<第3卷>, 金融財政事情研究会, 1983
鈴木/三ヶ月編, 注解民事執行法(2), 第一法規, 1986

266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01호 (2023.1.)

浦野雄幸, 判例民事執行法, 三省堂, 2005

相澤眞木／塚原聰編著, 民事執行の實務[第4版] 不動産執行編 上, きんざい, 2018

伊藤眞外編集代表, 條解民事執行法[第2版], 弘文堂, 2022

中野貞一郎/下山正明, 民事執行法[改訂版], 青林書院, 2021

東京地方裁判所民事執行センター實務研究會, 民事執行の實務[第3版], きんざい, 2012

最高裁判所事務總局民事局監修, 條解民事執行規則(改訂版), 司法協會, 1998

Abstract

Mortgage Auction Proceedings filed by the Financial Institution and Demand for Dividends of Wage Creditors

Kim, Sang-Soo

The subject case involved a wage creditor's failure to submit documentation regarding qualifications of demand for dividends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was sufficient to submit the dividend list by the time it was finalize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e., that the submission of materials *prima facie* establishing preferred credit as demand for dividends in even before the finalization of the dividend schedule is valid, has resulted in a precedent that has positive effect on the remedy of the rights of wage creditors. On the other hand, the financial institution, which is the principal party to mortgage auction, is concerned with whether such preferential treatment would hinder the progress of the auction process and, consequently, be an obstacle to the realization of its rights. It is also a question of whether the same conclusion would be reached in the case of a preference holder who is not a wage creditor.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subject ruling on such issues.

The subject decision is based on the argument that the need to protect wage creditors from a legal policy perspective is more important than the stability of the enforcement proces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impact of demand for dividends in by wage creditor on certain enforcement proceedings is significant. The significance of the subject ruling should be understood as something that should improve the management of the practice rather than the protection of wage creditors.

Specifically, it is the administration of a practice that also requires wage creditors to submit the necessary materials in a timely manner. The court may well be able to administer the proceedings in that manner.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make it clear to the parties that if they do not submit the necessary documents, they will not be allowed to be effective as demand for dividends.

268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01호 (2023.1.)

Key Words : Civil Enforcement, Mortgage Auction, Demand for Dividends, Wage Creditor,
Holder of Preferred Credit